東學革命과 淸日戰爭

鄭 鎭 午*

目 次

Ⅰ. 序 論
Ⅱ. 韓國의 內外情勢
1. 國內情勢
2. 對日關係
3. 對淸關係
Ⅲ. 淸日戰爭
1. 東學軍의 對外觀
2. 淸軍 請兵
3. 淸日戰爭
Ⅳ. 結 論

Ⅰ. 序 論

1894년에 일어난 동학혁명은 당시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여러가지 모순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혁명의 결과는 국내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고 같은 해 청·일전쟁이 이 동학혁명을 계기로 발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는 당시의 국제정세에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국내적이거나 국제적이거나 간에 혁명이나 전쟁과 같은 커다란 격변이나 변동은 어떠한 시점에서 급작히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동학혁명과 청일전쟁도 그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원인이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상당한

*法政大學 副敎授

시간적인 배경과 원인이 존재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학혁명의 국내적인 전개과정보다는 청일전쟁이라는 국제적인 측면을 더욱 상세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현시점의 국내외 정세는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볼 때 강대국들의 관계가 초미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19세기말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의 연구는 현시점에서도 음미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Ⅱ. 韓國의 內外情勢

1. 國內情勢

1876년 병자수호조약을 일본과 체결하여 문호개방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도 조선사회에는 중세적 통치체제의 모순에 대항하는 민란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19세기 중엽에는 그것이 국지적이고 분산적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농민전쟁으로 발전하거나 혁명성을 띨 만큼 된 것은 1894년의 갑오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문호개방 이후 체제적인 모순은 급격히 심화했고 일부 지식인층과 농민층의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은 급성장해 갔기 때문이다. 이 때 농민들은 집권층이 뚜렷한 대책없이 외세의 침략앞에 타협·굴복하고 농촌의 생산력이 무제한으로 밀려 들어오는 자본주의 상품 때문에 파괴되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또 농민과 다름없이 몰락한 농촌 지식인의 눈에도 보수파와 개화파로 나뉘어진 지배층 사이의 정쟁은 반봉건·반침략의 당면문제를 어느 하나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동학교도와 농민혁명군들이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음력 1월 10일에 일어난 고부민란이 시발이 된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동학교단이 주도하는 동학운동이 있었다. 즉 1892년 음력 11월 1일의 삼례집회, 1893년 음력 2월 11일의 제1차 보은집회, 1893년 음력 3월 11일의 제2차 보은집회이다.

이 때까지는 주로 상소, 집화 등 비폭력적 형태를 취한 교조신원운동이 주가 되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전쟁은 그 과정을 대체로 4단계로 나눌 수 있다.[1)]

1) 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5, pp. 220-221.

제1단계는 고부민란 단계이고, 제2단계는 전주입성까지이고, 제3단계는 집강소 시기이며, 제4단계는 1894년 10월 농민군이 재거하여 관군과 일본군에 의해 혁명에 실패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혁명의 목적은 봉건적인 지배체제에 반대하고 외세침략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두가지 성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경제면에 있어서의 높은 혁명성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상의 개혁 대상은 중앙정부의 권귀에 한정되었고 조선왕조 자체나 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은 이 혁명의 한계라 할 것이다.

2. 對日關係

1875년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한·일간에 맺어진 1876년의 병자수호조약으로 한국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벗어나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이 세계 자본주의체제 속에 강제로 편입된 것을 말한다. 그 이전에는 한국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까지 간접적으로 서양과 접촉하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서양과 직접 접촉하게 되었다.

1876년의 병자수호조약에 이르기까지의 대외적인 중요 사건으로서는 1866년의 한·미간에 일어난 신미양요와 한·프랑스간에 일어난 1866년의 병인양요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사건은 서양이 한국의 개국을 요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868년에 일본에 명치유신이 있은 후 한국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명치유신후 일본의 대한 외교교섭은 다음의 3단계로 나눌 수 있다.[2)]

제1단계는 1868년에 일본이 대마반주를 통해 보낸 大政一新의 통고書契를 한국정부가 서계격식의 이변을 들어 접수치 않은 단계이다.

제2단계는 1869년으로부터 1872년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 대표단을 파견하여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했으나 한국이 거절한 단계이다.

이 때까지의 특징적 양상은 일본측의 집요한 교섭전개와 조선정부의 일관된 거부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1868~1874년까지 7년간 계속되었는데 일본 국내의 여론은 한국의 오만불손한 처사를 응징해야 한다는 흥분된 정한론이 더욱 치열해져 갔다.[3)]

일본이 계속 외교관을 파견하여 성과없는 교섭을 중단치 않은 이유는 한국의 정치정세를 탐지

2) 류수현, 한국근대정치사, 정음문화사, 1984. pp. 87-88.
3) Ibid., p. 88

하여 후일에 대비코자 한 사전의 정보활동이었고, 둘째로는 국민의 관심을 여기에 집중시켜 유신이 결과한 후유적 갈등을 대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1874년에 일본은 무자비하게 대만을 정벌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대원군이 하야하고 민비정권이 들어서고 종래의 대일 강경책은 무원칙한 유화정책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측의 강요에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점과 청국의 권고가 있었던 외에 대원군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발의 의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종래의 유화적인 태도에서 강압적 태도로 교섭에 임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제3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와서는 일본정부는 대내문제의 수습을 일단락 짓고 대외문제로서 가장 큰 당면의 과제인 조선에의 침략을 위한 노력에 주력하게 되었던 것이다. 종래의 유화적인 방법을 버리고 무력에 의한 강압수단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드디어 운양호사건을 계획적으로 도발하여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4]

병자수호조규 제1조는 한국의 대청 종속관계를 부인하여 장차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청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근거를 확보해 두는데 있었던 것으로 한국지배를 위한 포석이었다. 또한 이 조약에서 규정된 치외법권은 물론,통상장정의 무역규칙중의 무관세 규정과 수호조규 부록 제7관의 한국내에서의 일본화폐 통용권을 규정한 것 등은 불과 20여년전 구미열강과 일본간에 체결된 불평등조약보다 더욱 가혹한 규정이었는데, 이 규정은 일본상인의 한국 진출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터무니 없이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병자수호조규는 명치유신이후 정한론의 실천단계에 들어와서 거둘 수 있었던 제1차적 성공이었고 한국지배를 위한 역사적 거점의 확보였던 것이다.

개항 후 6년동안 일본은 조심스럽게 정치적, 경제적 침투를 해왔는데 1882년에는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일본은 이 임오군란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의 사후처리로서 체결된 제물포 조약에서는 공사관 수비를 구실로 한국내 주병권을 획득하고(제5조) 이 조약과 함께 체결한 수호조규속약에서는 개항장에 있어서의 間行里程을 확장하여 통상활동 범위를 확대하고(제1조)[5]외교관과 그 수행원의 내지 遊歷權을 인정받아(제2조) 그들의 침략활동에 있어서 한층 유리한 조건을 획득했다. 그리고 한국측에 50만원의 손해배상을 과하고 군란의 괴수를 참형할 것과 수신사를 파일하여 사죄토록 하였다.

임오군란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모순의 파탄에서 그 근본요인을 찾을 수 있지만 일본의 은밀한 정치적 침략이 이 사건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일본정부는 개항이래 정치적 침략도 운연증 전개하여 왔는데 한국의 권력지배층을 회유하는 정치적, 외교적 술책을 강구했던 것이다.

4) 山邊健太郎, 日本の 韓國併合, 太平出版社, 東京, 1973, pp. 30-32.
渡邊學, 朝鮮近代史, 勁草書房, 東京, 1970. p. 37.
5) 이선근, 한국사(최근세편), 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5. p. 521.

개항이후 조선수신사 초대 외교도 이러한 정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이 임오군란의 한 원인이 되었던 일본인 교관에 의한 신식군대(倭別技) 훈련도 권력기구의 내부를 친일화 하고자 한 의도와 관련되고 있었다.[6]

한편 임오군란 당시의 일본 국내의 정치적 상황은 야당의 자유민권운동이 절정기에 달했던 시기로 정부에 대한 재야세력의 도전이 만만치 않아 명치유신체제가 확립된 후 최초로 맞이한 정치적 불안기였다.

따라서 재야세력의 압력에 수세에 몰린 명치정부 당로자들은 군란의 경위와 양상, 그리고 일본인이 입은 피해 등을 신문에 대대적으로 게재하여 국민의 관심을 여기에 집중시키려 했던 것이다.[7] 당시 일본의 자유민권사상이란 주권을 전제로 한 민권의 요구라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임오군란을 일본 주권의 위해라고 의식하는 한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의 대내적 정치불안을 극복하는데 크게 주효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은 이 시기부터 서서히 퇴조의 기미를 보여 점차 국권론파로 전향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8]

이처럼 임오군란은 일본의 한국침략을 더욱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부여하는 한편, 일본 국내의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는데 유효했다. 임오군란으로부터 2년 후인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다.

갑신정변은 1870년대의 문호개방을 전후한 시기에 근대적 정치체제 및 경제체제를 현실화시키려는 개화파 정치세력이 일으킨 사건이었다. 박규수,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김윤식, 오경석, 유대치, 이동인 등의 개화파 중심인물들은 우선 그 동조세력을 포섭하여 개화정치세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해간 개화파들은 정부의 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했다. 정부의 기구개편과 신사유람단 및 영선사의 파견에도 적극 개입했고 개화사상을 널리 펼치기 위한 문화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군사력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유학생을 기회있을 때마다 일본에 파견하여 1883년 말경에는 그 수가 50여명에 이르렀다. 개화파들은 정부의 재정타개책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김옥균은 당오전 발행대신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을 건의하고 일본으로부터 3백만원이란 거액을 차관하려다 실패하기 까지도 했다.

한편 임오군란 이후 민씨정권을 다시 등장시킨 청국은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조선의 식민지배를 획책했고 민씨정권은 청국에 의지하여 정권의 유지를 꾀했지만 이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성장한 개화파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민씨정권의 요직을 차지한 친청 수구세력은 개화파들이 양성한 군대를 모두 접수하고 군사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개화파를 압박했다. 위기에 몰린 개화파는 정변을 통해 민씨정권

6) 渡邊學, op. cit., p. 38.
7) 山邊健太郎, op. cit., p. 81.
8) 井上淸, 日本の 歷史(下), 岩波書店, 東京, 1970. pp. 4-5.

을 무너뜨리고 청국과의 종속관계를 청산할 것을 결정하고 우선 서울에 주재하는 미국 공사관에 도움을 청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냉담했던 일본공사 竹添이 본국을 다녀온 후 태도를 표변하여 개화파에게 접근했다. 이 밖에 월남문제를 둘러싼 청국과 프랑스 사이의 관계가 악화하여 조선 주둔 청국병사 1500명이 철수하고 뒤이어 일어난 청·불전쟁에서 청국이 패배함으로써 개화파에게 유리한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화파는 일본 공사관측의 후원을 확인하고 국왕을 그들의 편으로 일시나마 끌어 들인 후 계획대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하여 12월 4일에 정변을 일으켰다.

갑신정변은 3일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그 경위는 대체로 3단계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9]

첫째 단계는 정변을 일으켜 국왕을 경의궁으로 옮기고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이다.

두번째 단계는 정권을 쥔 개화파들이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고 정강을 제정·발표하는 과정이다. 개화당 정부의 정강정책은 모두 14개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요지는 청나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지향했고 아직 주권국가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반지배체제를 청산하려 했으며 또 뒷날의 동학농민전쟁에서 요구된 농민적 토지소유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지조법의 개혁이 제시되었으며 왕실경비와 정부재정을 구분하고 호조가 국가재정을 전관케 하며 특권상인의 존재를 부인한 것 등은 개화파의 국정개혁의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정변의 세번째 단계는 청국군의 공격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개화파 요인들이 일본으로 망명하는 과정이다. 개화파 정권이 마련한 정강정책을 담았으리라 추측되는 국왕의 정치혁신 조서가 내려짐과 동시에 서울에 주둔해 있던 1500명 청국군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열세한 일본군은 패퇴했다. 김옥균 등은 국왕과 함께 인천으로 피신하여 일본의 원조를 구하려 했으나 결국 몇 사람의 개화파 요인만이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했다. 정변이 실패한후 일본측은 공사관이 불타고 공사관 직원과 거류민이 희생된 사실에 대한 책임을 조선정부에 물었고 조선측은 정변에 일본측이 관여한 사실을 문책하는 한편 망명한 개화파 정객의 소환을 요구하며 맞섰으나 결국 조선의 일본에 대한 사의표명, 조선의 배상금 10만원 지불과 일본 공사관 수축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성조약이 1885년 1월 9일에 체결되었다.

한편 갑신정변의 실패로 한반도를 둘러싼 청국과의 경쟁관계에서 다시 불리한 처지에 빠진 일본은 정세를 만회하기 위해 이등박문을 전권대사로 청국에 파견하여 이홍장과 담판하게 한 결과 조선에서의 청·일 양국군의 철수,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 사건이 일어나서 청·일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천진조약을 1885년 4월 18일에 체결했다.

이로써 갑신정변의 뒷마무리는 일단 끝났지만 이 조약으로 일본은 조선문제에 있어서 청국과 같은 파병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10년후 일어난 동학농민전쟁때 일본의 파병 구

9) 강만길, op. cit., pp. 192-193.

실이 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조선에 대한 적극적 종주권 행사가 갑신정변을 계기로 크게 견제되기는 했으나 반면 조선정부내의 친일개화파는 완전히 일소되고 사대보수파의 장기집권을 굳혀 이 나라의 근대화에 상당한 차질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갑신정변 이후 약 10년간은 구미열강과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열강 상호간의 세력균형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탈외압적 안정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들의 쿠테타가 성공하였다면 비록 그들이 일본의 침략세력과 결탁되었다 해도 이 나라 근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갑신정변은 우리 역사 위에서 단계적으로나마 국민주권주의를 지향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정변을 부르조아적 정치운동의 시발점으로 보아야 옳다는 의견이 많다.[10]

3. 對淸關係

역사적으로 한국의 역사는 중국 대륙의 사태 특히 그 곳의 정치적 변혁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아 왔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문제 중에서 동학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는 19세기 중엽의 몇가지 사건을 들 수 있다.

즉 1840년의 영·청간의 아편전쟁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1842년 홍콩의 할양 등을 규정한 남경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은 청국을 가장 강대국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서양의 여러나라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서양인을 사교와 아편과 관련하여 생각하게 되었다.[11]

그리고 1850년에 태평청국난이 일어나고 1865년에는 태평천국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1858년의 천진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영불외교사절단의 북경 駐劄를 배척하게 되자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이어 북경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 철종은 1860년 10월 22일에 판중추 부사 신석우등의 진하사를 북경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1861년 3월에 귀국하여 중국의 사태가 한국에 미칠 것에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12]

이 1861년 신유년은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한 이듬해로서 그도 한·중관계에 대해 순망치한론을 들어 이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13]

---

10) Ibid,, p. 195.
11) 신복룡, 동학사상과 갑오농민혁명, 평민사, 1985. p. 58.
12) 철종실록 신유(1861) 4월 을묘
13) 동경대전 논학문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동학에 나타난 척양사상은 서학에 대한 반발과 경합되어진 대륙의 사태에 대한 의구심의 발로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임오군란은 민씨정권의 문호개방과 개화정책에 반대해서 구식군인들과 도시빈민층이 일으킨 것이었다. 그들은 제도개혁으로 대우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각 군영의 군병들은 서울 성안과 성밖 빈민들이 용병으로 고용된 경우가 많았는데 민씨정권이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훈련시킨 신식군대 별기군을 우대하고 이들 구식군인들을 홀대하여 생활이 위협받게 되자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폭동을 일으킨 군인들은 민씨정권에 의해 밀려나 있던 대원군에게 도움을 청했고 대원군은 군인폭동을 재집권의 기회로 이용하려 했다. 폭동군인들은 정부고관의 집을 차례로 습격하여 파괴하는 한편 별기군 병영을 거쳐 일본 공사관을 포위했고 이에 놀란 일본공사 花房義質은 스스로 공사관을 불지르고 본국으로 달아났다.

한편 왕십리, 이태원 일대의 빈민들이 가세함으로써 형세가 더욱 커진 폭동군은 왕궁을 습격하여 왕후 민씨를 찾았으나 실패하고 민겸호를 비롯한 민씨정권의 고관들을 처단하고 도망간 일본공사 일행을 인천까지 추격했다.

대원군이 집권함으로써 폭동은 일단 수그러졌다. 그러나 민씨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군인폭동이 한 때 성공함으로써 대원군의 재집권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 용병들과 도시빈민들의 폭동이 진보적인 정치세력과 연결되지 못하고 조선왕조적 지배질서를 다시 강화하려는 정치세력의 재등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역사적 제약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14]

다른 한편으로 임오군란과 대원군의 재집권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왕조는 청나라와의 종속적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병자수호조약을 계기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청국은 운양호사건으로 인한 일본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 조선에 대하여 일본과의 조약체결을 권유하면서도 일본의 한반도 진출에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 때문에 조선과 미국과의 조약체결을 권유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진출을 막으려 하는 한편, 조선왕조의 내정과 외교를 적극적으로 간섭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임오군란을 당하게 된 것이다.

임오군란으로 공사관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본은 그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군대파견을 결정했다. 그러나 청국은 그것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일본세력의 확대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을 우려하여 신속히 4척의 군함으로 약 3천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다시 집권한 대원군을 청국으로 납치하고 조선에 대해 정치·경제·외교면의 간섭을 적극화했다.

청국이 대원군을 납치한 이유는 우선 그가 전과 같이 일본에 대해 강경책을 취함으로써 일본으

14) 강만길, op. cit., p. 187.

로 하여금 무력개입할 구실을 줄까 염려한데 있었으며, 또 하나는 청국의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이 대원군보다는 민씨 일파가 집권할 경우 더 쉬워진다는 계략에 있었다.

이와 같은 청국측의 책략은 적중해서 이후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침투는 상당히 제한되었고 반대로 청국의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진출은 이후 10여 년간, 즉 청일전쟁 이전까지 활발해져 갔다.

이를간의 격전끝에 군란을 진압시킨 후 청국에서는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 조선의 국왕을 폐위시키고 한반도를 청국의 성으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었고 조선에 고급관리를 상주시켜 정치적, 군사적으로 조선의 실권을 장악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왕조를 그대로 두고 내정간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15]

그리하여 袁世凱등이 지휘하는 군대를 상주시켜 조선군대를 훈련시키고 馬建常과 독일인 묄렌도르프 등을 정치와 외교고문으로 보내어 관제와 군제를 개편한 후 외교와 내정에 깊이 간섭하는 한편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등의 무역조약을 맺어 경제적 침투에도 일본을 앞서 갔다. 아편전쟁 이후 영국, 프랑스 등 서양제국의 침략에 시달리던 청국은 일본의 조선 진출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대한 종래의 의례적 종속관계를 근대적, 실질적 식민지관계로 바꾸기 위해 외교와 내정을 적극적으로 간섭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청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운동으로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으나 청국의 무력간섭으로 실패했고 결국 청일전쟁 때까지 청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간섭은 계속되었다.

Ⅲ. 淸日戰爭

1. 東學軍의 對外觀

1890년대로 오면서 우리나라는 일본 및 구미와의 불평등한 개항으로 인하여 봉건적 모순과 정치적 갈등을 더욱 격화시켜 1894년초의 동학혁명이 일어날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와 상황변화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불러 일으킨 계층이 동학이었다. 그것은 이 때가 동학이 창도되던 1860년대 전후의 역사적 상황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학의 교세가 날로 팽창되어 가는데 위협을 느낀 정부에 의해서 교조 최 제우가 피체되어 순교한 이후 교도들은 30여년동안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동학은 사교로 낙인이 찍혀 공인을 받지 못하자 포교공인운동을 대대적으로 폈다.

15) Ibid., p. 188.

그 계기를 보면 분명 동학 확산의 금지를 구실로 신도들에게 심한 수탈, 착취 행위를 일삼았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대중집회가 1892년의 삼례집회에서였다. 즉, 탄압받는 수 천명의 동학 신도가 대대적으로 포교공인의 항의운동을 전개하자고 요구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16]

1893년 3월에는 교도 박 광호, 손 병희 선생등 40여명이 과거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위장 상경하여 복합상소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외국인 주택, 교회, 영사관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였다.[17]

이 때 정치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으면서 기회가 있으면 고위직을 차지하려는 대원군은 이같은 동학 교도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민씨 일파의 전횡을 꺾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였고「척왜양」을 외치는 동학도에 관해 청·일 역시 소위 종주권에 대한 마지막 결판을 기도한 채 나름대로 주시하고 있었다.

이런 움직임속에서 서울에서의 복합상소운동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동학 교도들은 다시 내려가 충청도 보은장내에서 5만여명의 신도들을 모아「보은 대집회」를 성공리에 마치게 된 것이다. 평화적인 시위에다가 사상 유례가 없는 다수 신도의 집회와 거기서 결의된 내용은 정부와 청·일 양국의 수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첫째, 교조신원을 포함한 포교의 공인을 최대의 목표로 표방하면서도 반봉건, 반침략, 반외세라는 현실적인 요구-정치적 변혁-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인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반봉건체제의 개혁에서 반침략과 반외세라는 주체적인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과 함께 점차 정치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18]

특히, 동학 교도들은「외래 종교의 배척과 외국 상인의 축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구미 선교사의 출국과 기독교계 학교 재학생의 자진 퇴학을 요구하는등 배외관은 철저하였다.[19]

보은집회에 앞서서 동학 교도의 괘서에 이미 외세를 배척하는 내용이 있었지만「보은 대집회」에서 이같은 배척적인 대외관은 현저하게 언행으로 구체화되었다. 척왜·양창의를 전면에 부각시킴과 동시에 호소문에서「이제 왜나, 구미 제국이 우리의 뱃속 깊숙히 들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토는 이적의 소굴화가 되었으니 동학 신도는 우리 것을 소중히 지키면서 왜·양을 소탕·파기하고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궐기해야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총 궐기를 재

16) 고종실록, 고종 29년 5월 10일
17)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고종 30년 2월 27일.
18) 이현희, 동학사상과 동학혁명, 청아출판사, 1984. p.81.
19) 東京朝日新聞, 1893년 4월 18일.

창하였다.[20]

정부는 침략자 일본과 구미를 추종하는 악질적 매국노의 언행을 매우 중시하는 일방, 외세 침략에 신명을 바쳐 방어하는 동학 교도를 탄압 억제한다고 비판하였다.

왜·양의 조선 정책은 곧「조선으로써 조선을 공격하는 것이 왜·양의 뛰어난 기술」이라고 지적하면서 왜·양의 분열이간책략을 배격하고 반침략에 온 대중이 찬동하고 참여해 줄 것을 절규하였다.

보은 대집회에는 모인 인원수의 50%가 호남 출신이었고 그들은 최후까지 저항했던 기록을 남겼다.

이것은 결국 1894년 초의 동학혁명운동과 연관지어 평가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21]

동학혁명운동 전후에서의 교도의 대외관은 위정척사파의 민족 정통성 보전이라는 고정관점과 같이 왜·양을 배척하면서 우리 것을 굳게 지키자는 배외의식으로 충만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청·일 두 나라의 침략을 배격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었다.[22]

2. 淸軍請兵

동학혁명군이 날로 번성, 취합되어가 드디어 북상 1894년 4월 28일 전주까지 함락하였다.

불과 20일 내외에 세번에 걸친 패전의 보고가 정부에 당도하자 왕이하 매우 당황하였다.

그들은 초토사의 경군이 동학혁명군을 축멸할 것으로 알았으나 성공은 커녕 완전 실패로 돌아가자 당황치 않을 수 없었다.

더욱 초토사 홍 계훈이 외국 군인의 차입안을 요청하자 동학 교도들은 더욱 황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민씨 세도가 가운데 민영준은 원세개에게 청국 군대의 조선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와같이 서울에 외국 군대의 파견 요청설이 떠돌게 되자 조야에서는 크게 우려하게 되었거니와 외국 군대의 차입설은 이미 동학혁명운동 발발 1년전부터 동학 교도의 움직임이 있자, 떠돌던 일이었다.

즉, 고종 30년(1893년) 2월 24일 독판교섭통상사무 조 병직은 통리교섭통상사의 원세개에게 조회하여 북양 대신에게 전보로 상세히 이 동학교의 사정을 말하고 동학 교도의 분란을 막아주도록 요청함에서 외국 군대의 차병 문제가 서서히 제기된 것이다.[23]

---

20)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의 硏究(下) 1940. pp. 225-232.

21) 김의환,〈1892·3년의 동학농민운동과 그 성격〉,《한국사연구》5, 1970.

22) 이현희,〈동학사상의 배경과 그 의식의 성장〉,《한국사상》18, 1981.

23)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고종 30년 2월 24일자.

그 다음날인 2월 25일에는 국내에서 동학의 주모자를 주륙할 것을 옥당이 연차하여 요청할 정도였다.[24]

그 이후에도 동학 교도들이 「괴이황탄의 말로 백성을 현혹하는 동학의 두목을 규탄하고 그 여당을 엄단하라」는 등의 교가 계속 내려지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접할 수 있다.[25]

이에 서울 주재 각국 사신들이 동학을 두려워 했다는 것이다.

그 중 영국 총영사 힐리어는 원세개에게 군함을 조달하여 동학 교도를 진압토록 권유할 정도였다.

이에 원세개는 「청국이 탄압의 책임이 있어 편의설법할 것이므로 진정하라」고 권하면서 북양대신 직례총독 이 홍장에게 전청하여 북양 해군 군함 來遠, 靖遠 두 척의 함정을 인천에 파견, 위협하였다.[26]

고종은 그 해 3월 25일 함원전에서 영의정 심 순택, 좌의정, 조 병세, 우의정 정 범조와 같이 동학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동학의 교세가 창궐하여 충청 병영의 군인으로는 진무할 힘이 없고 京兵 역시 파송할 수 없으므로 청국 군사를 빌어서 다스리고자 한다」고 그의 외병 차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심 순택은 「불가하다」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종은 고집을 부리고 박 재순을 보내 원세개와 차병 문제를 협의케 한 바 있었다.[27]

따라서 정부 당국자는 보은 대집회가 척왜·양창의를 내세우면서 주한 외국사신들을 위협, 외교적으로 사단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우려한 나머지 청국의 군대를 파견하여 진정토록 함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3월 26일 양호선무사 어 윤중이 보은 대집회장에 나와 해산을 종용한 바 있었다.

이 때 교도 허 연, 서 병학, 이 중려, 송 병회, 이 회인, 조 재하, 이 근풍 등은 글을 올려 「동심하는 바는 척왜·척양에 있으며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는데 있다」고 그들의 외세 배격과 보국 안민의 의미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동학 교도를 「비류, 비적, 폭한으로 접대하고 침략, 학대함이 극에 이르렀다」고 그들의 애국 충성의 역사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28]

결국, 강제 해산 명령으로 그 해 4월초, 제 2세 교조 최 시형 등 간부가 퇴거하고 남은 무리도 모두 흩어지고 만 것이다.[29]

---

24) 承政院日記, 고종 30년 2월 25일.
25) 日省錄, 고종 30년 2월 26일.
26) 《韓國外交文書》 2, 日案, 2276호, 고종 30년 2월 27일.
27)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卷12, 第883, 北洋大臣 來電 2.
28) 《高宗實錄》, 고종 30년 3월 30일.
29) 承政院日記, 고종 30년 4월 3일.

이처럼 청국의 군대 파견 요청은 동학혁명운동 발발 이전에 충분히 논란된 바 있었다.

고종 등 최고위층은 청국에 차병을 요청하였으나 대신급들은 매우 우려를 표하고 반대한 바 있었는데 동학 혁명군이 전주를 4월 28일 함락함으로써 정세는 급변하였다.

4월 30일 독판교섭통상사무 조 병직은 즉시 원세개에게 조회하여 차병함으로써 혁명군을 섬멸케 간청했다. 대신들은 그 때에도 사실상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의내무부사 성 기운을 보내어 원세개에게 조회를 전했다.

청국의 동학 정책적인면에서는 조선 정부내에서 파병 요청만 오면 이를 기화로 군대를 파견함은 물론 내정에 깊이 간여하여 한국에서의 일본, 러시아 세력등을 제거하고 독점적인 우위권을 장악할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원세개 자신도 그 자신으로 하여금 군대를 지휘하라고 하면 5일 이내에 토평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어떤 구실을 잡을 호기를 포착할 계제에 있었다.

결국 청군의 출동을 공식화하는 문서가 원세개를 통하여 실력자 이 홍장에게 알려지자 절호의 기회로 알고 지체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군의 파병은 원세개의 충돌질과 친청파의 작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국 정부는「마침 잘 되었다. 조선내의 위기가 동학 교도의 분란인 것 같으니 우리는 차제에 조선에 파병하여 병권을 장악하고 조선 내정에 깊이 간여하는 것이 우리의 장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다. 실제로 동학 교도의 분란은 저희 군사로도 족히 진정시킬 수 있는데 이처럼 일을 크게 확대함은 자못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내색은 하지 말고 오로지 조선의 요청에 의해서 파병한 것으로만 알고 겉으로 행동하는 척해야 한다. 우리의 군대가 조선에 파병되면 곧 일본에 알려야 되니 우리는 일본과 무력적인 대결도 불사하게 될 결정적인 시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 때를 위하여 우리는 만반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원세개에게 일을 보아가며 살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청국의 동학교도에 대한 조선 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였다.[30]

다음 5월 1일 이 홍장은 청국 군함 결재를 청하여 북양수사제독 정 여창으로 하여금 제원·양위 두 척의 함정을 인천으로 출동케 하고 제독 섭 지초와 총병 섭 사성에게 먼저 육군 1천5백명을 인솔, 기선으로 인천에 도착, 발진케 하였다. 이 날 조선은 공조참판 이 중하를 영접관으로 임명하여 출발케 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31]

물론 이는 친청파의 주선에 의해서였다. 동시에 5월 3일 주일 청국 공사 왕봉조는 일본 외무대신에게 천진조약에 따라 조선 정부에서 원병을 청하므로 청국이 조선에 파병함을 통고하였다.

청국의 조선 파병은 우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나, 원래부터 청국 정부의 조선 내정 간섭의 단서를 잡으려는 끈질긴 정책적 차원에서 더 깊은 음모속에 달성되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30)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 第13-5, 北洋大臣 來電
31) 《大韓季年史》 고종 31년 5월

3. 淸日戰爭

한편 1884년의 갑신 정변을 전후하여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침투가 활발하게 되었는데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견제하고 있던 영국이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 1885년 4월에 일어났다.

이 사건은 일본으로 하여금 그들의 침략 대상인 한국이 구미 열강에 의해 먼저 지배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초조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여 일본 지배층의 한국에 대한 야심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다.

따라서 18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일본의 대한정책이 한결 적극화되어 갔다.

즉 1890년의 제1의회에서 山縣 수상은「금후의 일본의 군비는 단순히 주권선을 방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권선에 접한 지역, 즉 구체적으로는 조선을 이익선으로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부터 한국 지배를 위해 군비 확충을 서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전쟁 대비책을 선언한 것이었다.[32]

이 시기에 와서 일본 정부가 한국 침략 정책을 더욱 촉진하게 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충격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즉, 당시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요구는 무엇보다 식량과 금의 확보에 있었다.

1889년의 일본에서의 미곡 흉작과 그로 인한 민란을[33] 계기로 일본은 미곡의 수입을 위해서도 한국의 지배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한국에서도 1889년 함경감사 조병식이 곡물의 대일 수출을 막기 위해 방곡령을 발하게 되니 일본은 큰 타격을 입게 되어 1890년 일본의 항의와 위협 때문에 방곡령을 해제하게 되었으나, 일본으로서는 한국을 식량 공급지로서 확보해야겠다는 요구를 더욱 절실히 하게 되었다.

1890년을 전후한 일본의 자본주의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외 무역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통화(금본위)의 확보책으로서의 금의 획득이었다.

그런데 1893년까지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지금총액의 68%인 835만원은 한국에서 획득한 것이었다.[34]

일본의 한국으로부터의 지금수입은 일반 상품의 수출 대금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강화도조약 부록조규(제7조)에서 일본의 은화와 일본은행 태환권의 한국내에서의 통용규정을 이용하여 각종

32) 井上清, op. cit., p. 20.
33) Ibid., p. 15.
34) Ibid., p. 21.

의 사기적 방법으로 한국의 채광업자나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것과 대금 저당으로서 금광 개발권을 취득해서 획득한 것이었다.[35]

따라서 한국에서의 지금 획득이야말로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통화의 확보책이었고 이 금의 획득을 위한 가장 값싼 방법이 바로 한국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지배였다.

이 때 한국의 정권은 사대 보수파의 수중에서 전단되고 청국이 일본을 정치적으로나 무역면에서 위협하게 되니 그것은 일본의 한반도에로의 적극적 진출과 청에 대한 도전이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동방 정책론", "대동합방론" 그리고 "식민론" 등의 주장이 나타났는데 그 어느 것이나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의 침략론이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명치 유신 후 급격히 단행된 일본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수반하게 된 내재적 재 모순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이었다.[36]

이와같은 상황에서 1893년부터는 대청 전쟁 준비를 서둘게 되었다.[37]

즉 1893년 4월 일본 군부에서는「출수준비품 취급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기 군수품을 준비토록 하고 5월에는「전시대본영조례」를 재정하는 한편 川上참모 차장과 외상 陸奧宗光은 비밀히 군사전략과 외교 정책에 관한 호흡 조정을 하고 있었다.

"對外硬"이라고 하는 당시의 슬로우건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재야 세력이 이와 같은 정부와 군부의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집약적 표현이었다.[38]

한국을 병탐하겠다는 일본의 집요하고도 주도한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시기에 한말 지배층은 주변정세의 동향도 아랑곳 없이 권력 갈등에 영일이 없을 때 갑오 동학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마침내 동학 농민군이 전주를 공략하게 되는 형세가 되자 조선 정부는 청조에 출병을 요청했다.

마침 그 당시 일본의 제 6 의회는 이등내각 불신임의 상주안을 가결하여 이등정부는 도각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었는데[39] 청국으로부터 접수된 한국 출병의 천문이야말로 이등 내각으로서는 천재일우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청·일전쟁 발단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이등 정부는 6월 2일 의회를 해산함과 동시에 천진 조

35) Ibid., p. 21.
조기준, 한국근대경제발달사(한국문화사대계(Ⅱ),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65), pp. 784-788.
36) 류수현, op. cit., p. 100-102.
37) 伊藤正德, 軍閥興亡史(文藝春秋社發行本(1), 東京, 昭和 32年), p. 71.
38) 井上淸, op. cit., p. 25.
39) Ibid., p. 31.

약 제3조를 빙자하여 한국 출병을 결정하고 6월 5일 대본영을 설치하여 廣島의 제5사단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청·일 양군이 한국에 출동한다는 소식에 전주를 점령하고 있던 전 봉준은 즉각 정부측의 귀화 권고를 받아들여 타협·화해하고 6월 11일 전주성을 자진 철수했다.

따라서 민란 진압이라는 출병 구실은 사실상 있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일본으로서는 이 기회에 청에 대해 개전할 어떠한 단서라도 찾아야 했던 것이다.[40] 동학 혁명군도 전주를 철수하여 해산·귀가하고 서울 장안도 평온한 상황에 일본군이 6월 10일에 입성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한 것이었다. 주한 외교 사절들도 일본의 내심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조선 정부가 일본측에 철병요구를 하게 되자, 러시아와 독일 공사는 대조 일본 공사에게 일본육군의 입경이유를 설명토록 요구했다. 대조 공사는 그 변명에 궁한 나머지 6월 11일자로 육오 외상에게 일본 병력의 출동을 우선 중지해주기를 전문으로 요청하게 되었으나[41] 일본 정부로서는 이미 흥분된 국민의 쇼비니즘과 군부의 전쟁 충동을 제어할 힘도 없을 뿐 아니라 대내적 위기를 극복키 위해서도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 행동은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42]

6월 11일부터 7월 25일까지 청·일양군의 철퇴를 위한 교섭이 주로 미국측의 공정하고도 우호적인 조정을 기대한다는 청국과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 전개되었으나 주한 미 공사 John. M. B. Sill과 주일 미 공사 Edwin Dun이 엄정 중립이 아니라 일본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열강간의 외교적 절충도 실패하였다.[43]

더우기 일본은 왕궁을 점령하여 대원군의 허수아비 내각을 구성하여 친청 세력을 제거하고 한국의 내정 개혁을 단행하여 민생을 구제하고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토록 하기 위해 일본이 원조를 해야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조선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로서는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운위할 처지가 되지 못했음은 물론, 오직 일본의 강압적 지시에 묵종할 도리 밖에 없었다.

일본은 개전을 앞두고 국제 열강 특히 영·미로부터의 우호적 반응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44] 일본의 전쟁 도발은 국제 열강의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영·미의 우호적 반응을 확인한데서 이루어졌다.

특히 영국으로서는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 러시아의 남진 세력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기타의 열강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일본의 전력을 비교적 과소 평가했고 상대적으로

40) 山邊健太郎, op. cit., pp. 189-208.
41)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册, 文書番號 535.
42) W. Langer, The Diplomacy of Imperialism (1890-1902) (Plimpton Press, Norwood, Massachusetts, 1956), p. 173.
43) 田保橋潔, op. cit., pp. 530-537.
44)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册, 文書番號 497.

청국의 전력을 비교적 과대평가하여 청·일 전쟁이 필경에는 어느 일방의 압도적 승리를 결과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전후 한반도에서는 청·일 양국의 세력 균형이 형성될 것이며 그러한 상황은 구미 열강의 발언권을 높이는 결과가 되며 또한 동양의 양대 국가가 전쟁으로 국력을 소비한다는 자체가 또한 구미 열강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45]

청국으로서는 대일 전쟁을 전제로 한 계획적 파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처음부터 전의가 없었고 준비도 되어있지 않았다. 사실 청·일 전쟁은 전의가 없었던 청군에 대하여 선전포고도 없이 감행된 일본 육·해군의 일방적인 기습 공격으로 발단했다.

즉, 7월 25일의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이 감행한 청국 함대 기습 공격과 7월 29일의 아산·성환의 청군에 대한 선제 공격이 예고도 없이 감행된 후인, 8월 1일에야 일본은 대청 선전 포고를 했다.

1895년 2월까지의 전국은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청국은 사전에 준비도 없었고 일본군의 군사력을 과소 평가한 오산과 또한 중앙 정부와 북양 군벌간의 불협화 등으로 전쟁을 계속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 일본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청·일 전쟁의 강화조건은 청에 대해 지나치게 혹독한 것이었다.

즉, 1895년 4월 17일의 하관 강화조약은 1)청국은 조선이 완전 독립국임을 승인하고 2)청국은 일본에 요동 반도와 대만 및 팽호 열도를 할양하고 3)전비상금으로 庫平銀 2억냥(일화 3억원)을 지불토록 하고 4)구주열국과 체결한 조건에 입각하여 청·일 신 통상 항해조약과 육로 교통 무역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것. 5)①기존의 개시·개항장 이외에 일본을 위해 4시항을 열 것. ②일본 기선을 위한 양자강의 항로를 확장할 것. ③청국내의 일본인 구매품 및 운송품의 항로세를 면제할 것. ④청국 개항장에서 일본인은 자유로 각종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 제품은 면세토록 할 것 등[46] 이상의 5개항 이었는데 제1조의 한국의 완전 독립 승인이란 한국에 대한 청의 간섭을 완전 배제한다는 규정이다.

이미 일본은 청·일 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 전체를 점령한 상태에서 그 해 8월 20일「한·일 잠정 합동조관」[47]을, 동월 26일에는「대일본·대조선양국맹약」[48]을 조선 정부에 강요하여 전자에 의하여 일본은 경부선, 경인선의 양 철도 부설권을 탈취하고 후자에 의해 조선 정부는 일본군의 작전 및 식량 공급을 위한 모든 편의를 일본군에 부여할 것을 의무화하였던 것이다.

이제 한국은 일본의 군사 점령지로서 그들의 무력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으니 일본으로서는 구미 열강의 눈치 이외에는 한국을 두고 두려울 것이 없었다.

45) W. Langer. op. cit., pp. 174-175.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册, 文書番號 645.
46) 日本外交文書, 第28卷, 第1册, 文書番號 1089.
47)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册, 文書番號 442.
48)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册, 文書番號 706

한편, 이 조약에 앞서 동학군의 전 봉준은 10월(음력)초에 최 시형, 김 개남, 손 병희 등과 함께 삼례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에 군사적으로 항거하는 주전론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주의 우금고개에서 11월에 한·일 연합군과 결전을 벌였으나 신식 무기를 지닌 한·일연합군에게 패퇴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전 봉준은 군세를 잃지 않은 김 개남을 만나러 가는 도중 순창에서 피체되고 동학혁명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제 일본은 구미 열강으로부터 압박받던 국가로부터 한국을 지배하고 중국을 제어하여 압박하는 제국으로 구미 열강의 대오에 끼어 그들의 한국 지배라는 숙원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였다.

이미 청에 대한 선전포고가 있은지 불과 3일만인 8월 4일 대조규계 주한 공사는 육오 외상에게 대한 기본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상신했는데 그 내용은 1) 조선을 은연히 일본의 보호하에 두어야 하고 2) 조선 정부 관리의 심정을 회유하여 일본에 가담토록 하고 3)외교 사무에는 각별히 주의하여 외국과의 차질을 없도록 함이 옳을 것이라 하였다.[49]

청·일 전쟁 개전과 함께 그들의 앞으로의 대한 정책의 기본을 확정하게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대조 공사의 상신서의 주지는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보호권의 확립이었는데 이 상신서에 입각하여 8월 17일 육오 외상은 각의에서 대한 기본 정책 4개안을 제시하고 일련의 진지한 심의를 계속했다.

그 제1안은 일본이 금일에 이르기까지 내외에 한국의 완전 독립을 선언한 이상, 일본은 그 독립을 침해할 수 없고 다만 조력에 그칠 뿐 자주 자치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제 2안은 한국을 명의상의 독립국으로 보호토록 하고 내정에 직접 간섭하여 타국의 간섭이나 침략을 받지 않도록 일본이 보호한다는 안이었다.

제 3안은 한국이 독립 국가로서의 자주 자치 능력도 없고 일본이 영구토록 한국의 독립 보전을 기할 능력도 없다면 한국을 청·일 양국의 공동 보호하에 두는 원칙을 생각할 수 있다는 안이었다.

제 4안은 청·일 양국과 구미 열강의 공동보호하에 한국을 유럽의 벨지움, 스위스와 같은 국제 중립국으로 하는 안이었다.

이 각의에서는 물론 제 2안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한국을 일본의 단독 보호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한국의 보호국화라는 대한 기본 정책이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50]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이 각의에서 논의된 바처럼 열국의 간섭을 여하히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일본은 제 2안의 확인과 함께 일방으로는 전쟁을 수행하고 타방으로는 일본의 한반도

49)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文書番號 429.

50) 류수현, op. cit., p. 112.

침략을 본격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닌 갑오개혁(1894. 7. 24~1895. 5. 23)도 강행하였다.[51]

청·일 양국이 강화 조약에 정식 조인하고 1895년 4월 17일에 일본의 온 국민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미처 냉정도 되찾기 전에 노·독·불 3국 간섭(the triple intervention)이 표명되었다.

삼국 간섭이 신속히 주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일본의 청에 대한 요구가 과렴치하게 탐욕적이었다는 점에서 영·미·노·독·불 등 열강이 일본의 처사를 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영·미는 처음부터 일본에 우호적이기는 했으나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표면상 일본을 옹호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며 더욱 향후 중국에 있어서의 이권확충을 고려하는 경우 중국을 이와같이 무자비하게 회생시켜 일본에 동조할 수는 없었다.

노·독·불 3국의 일본에 대한 「우호적 권고」의 요지는 「일본의 요동 반도 점유는 청의 수도를 위태롭게 하고 한국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여 극동의 평화를 방해한다」[52]는 것이었는데 이 요지는 적어도 명분상 타당한 것이었고 특히 일본의 요동 반도 점유는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대한 위협이 되었음은 명백하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 독·불이 동조하게 된 것은 독일로서는 일본에 우호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오직 영미에만 접근하여 독일을 소홀히 하였고 또한 중국진출에 있어서 영국의 독점적 지위에 비해서 후진적 지위에 있었던 독일로서는 이 기회에 중국에 동정적인 태도를 보여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를 유리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53]

한편 불란서는 안남전쟁을 계기로 중국 진출에 있어서 영국의 독점적 지위에 가장 큰 도전 세력이었던 것이며 당시 영국은 중국에 있어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으로는 불란서로부터, 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다. 더욱 당시 불은 노와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노에 동조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54]

삼국 간섭이 조선 정계에 크나 큰 충격을 가한 것은 필연적 결과였다.

즉, 청·일 전쟁중에 구축하였던 친일세력은 점차 쇠퇴하고 민비의 책동을 중심으로 배일·친로 세력이 점차 득세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제도 개혁은 일조에 와해되고 일본은 조선 정계에서 쓰라린 정치적 좌절을 맛보았던 것이다.

---

51) 강만길, op. cit., p. 201.

52) 日本外交文書, 第28卷, 第2册, 文書番號 671 및 同文書, 文書番號 746.
W. Langer, op. cit., pp. 179-186. A. Whitney Griswold, The Far Easter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Yale Univ. Press, 1964), pp. 39-41.

53) W. Langer, op. cit., p. 177.
日本外交文書, 第28卷, 第2册, 文書番號 644.

54) 日本外交文書, 文書番號 674.
W. Langer, op. cit., p. 185.

청·일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 한국의 배타적 지배에 있었는데 피흘려 싸운 결과가 노의 주동적 간섭에 의해 허무하게 수포화하게 되었으니 일본의 노에 대한 분노는 다음날 노·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Ⅳ. 結 論

1860년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한 이후 1894년 동학혁명이 발생하고 이 해 청일전쟁이 일어나기까지 33년간의 한국사는 실로 내우외환이 끊임없던 기간이었다.

특히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이후 집요하게 한국을 침략하려는 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1876년에는 드디어 병자수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여 본격적인 침략정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1882년의 임오군란과 1884년의 갑신정변을 한국침략의 계기로 만드는 단서로 활용하였다.

청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종속시키려는 책략을 계속하였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려 했고 갑신정변 이후에도 계속 그러한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들 양국은 1894년의 동학혁명을 계기로 충돌하게 되었으나 그 경위와 내용은 오랜 기간 양국의 한반도 지배정책 추구의 결과였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청국은 한국을 자기네의 성으로 만들려고도 했고, 일본은 청·일이 한국을 공동보호하에 두거나 국제중립국으로 하자는 안까지도 만들고 있었다. 이런데도 한말의 지배층은 주변정세의 동향에는 무지하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각 파의 권력갈등에 영일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건적 지배체제에 반대하고 외세침략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는 동학혁명군을 적으로 돌리고 외세를 불러들여 진압하는 우를 범함으로써 망국의 길로 한걸음 더 나가고 말았다.

삼국간섭도 모든 나라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각축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현금에도 변함없는 현상이다.

한국은 자주독립국가로서 내정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항상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주변정세를 통찰하여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Summary

Tonghak Revolution and Sino-Japanese War

Jung Jin-o

China and Japan had been seeking the policies of the rule over Korea for many decades since Choi Je-woo founded Tonghak in 1860.

China and Japan came into war in Korea in 1894-95 on the momentum of the Tonghak revolution which opposed the feudal ruling system and the invasion of foreign powers.

But the Korean ruling class called in the foreign powers—China and Japan—,defeated the revolutionary army and stepped up to losing of nation.

We must get the lesson that the calling in of foreign powers is fatal for the national security because of the foreign powers' cold-hearted game.